

르노삼성·현대중·금타... 노사갈등에 멎드는 제조업

(금호타이어)

르노삼성 노조 5개월째 부분파업 생산 차질 6천대, 손실추정 1200억

현대중·대우조선 인수합병 반대 20일 쟁의행위·단체협상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단체협상 합의안 부결 노조, 인원 전환배치 강한 거부감

국내 제조업계가 노사 갈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 타결 불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반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생산인력의 전환배치 문제로 노사 합의가 실패해 접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가장 기간 파업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파업을 실시한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2월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위한 제14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가 임단협에 불만을 품고 단행한 부분 파업 횟수는 총 32차례, 120시간으로 늘었다. 르노삼성은 이로 인해 6000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 추정액은 1200억원대에 이른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QM6를 생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상에 나가고 있다. 기본급 10만6677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기본급 동결 대신 최대 14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수출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닛산 로그의 물량 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노조 측은 움직임을 변함없다. 지난해 르노삼성이 수출한 닛산 로그의 생산량은 10만7245대로 회사 전체 수출 물량의 78%, 전체 판매량의 절반(47%)을 차지했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임단협을 두고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측이 노조에 현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에 반대해 오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당초 노조는 지난달 31일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예정했으나 당시 대우조선 인수설이 나오면서 잠정 연기됐다.

노조는 그동안 대우조선 인수가 구조조정 등을 동반할 우려가 있고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 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18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공동기자회견, 21일 긴급토론회, 27일 금속노조 상경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인수 반대 쟁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임단협 찬반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노사갈등에 빠졌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3일 광주·곡성·평택공장 전체 조합원 2910명 중 261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 8표, 찬성 650표(24.9%), 반대 1951표(74.7%)로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제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12차 본교섭을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합의안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타이어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운영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4월2일 노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 합의안’에 따라 임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사측이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 등에서 하루 186여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장별로 발생되는 여유 인력을 생산라인 이동률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심수년 간 자리를 지켜온 공장을 떠나 타 지역 생산라인으로 배치될 경우 현장 적응 등 불편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불러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반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시 합의안을 마련해 재논의 할 예정”이라며 “전환배치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은행 대출연체율 0.4%... 0.2%p 하락

금감원, 연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지난해 12월 대출연체율이 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에 넉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가 4조4000억원 규모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3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3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

대비 0.94%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연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성동조선해양(1조4000억원) 등 연체채권 1조6000억원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낮아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 대비 0.18%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낮아진 0.32%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8%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영업자 첫 초청한 文... 독자적 정책 마땅”

文 대통령, 청소년 소상공인과 대화

자영업자, 가족 포함하면 674만명 기본법제정·연구소설치 등 정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대 정부 최초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존재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번 일정은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4번째 진행한 경제인 대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 그달 15일 대·중견기업인,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건넨 첫 인사말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온몸에 감명을 묻히고 다니는 걸 참피하게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나. 그 시절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껏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수행한다. 호칭은 ‘사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뉴스1

지만, 실상은 자기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증과 하중 자영업자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며 “작년 12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만든 정책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자영업정책 전담 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길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법적 노사들에서 자영업자가 새로운 경제주체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이라며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약 11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다. 이는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61명)가 초청됐다.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약 80명의 자영업·소상공인, 약 160명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번 대화의 사회는 자영업 창업 및 폐업 경험으로 자영업계 이해도가 높은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았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는 이전 경제인 대화처럼 격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고,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지원, ▲경쟁비용부담 완화, ▲업종별 규제 해소 등이 이번 대화의 큰 주제들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6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인태연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우승준 기자 dnt114@

대기업, 올 수시채용 늘고 공채 줄어든다

대기업 68%, 중견 30% 공채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대졸 신입 정기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해 대기업 수시채용 계획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9.8%포인트 증가하고, 정기 공채 비중은 반대로 8.1%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신입 채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공채 계획은 대기업이 67.6%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29.5% ▲중소기업 1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시채용은 ▲중소기업의 모집계획이 46.9%에 달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38.4% ▲대기업 11.8%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대

기업 3분의 2가 공채를 택했던 것.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채비율은 대기업이 높고 수시채용은 중소기업이 높은 양극화 현상은 유지됐지만, 대기업의 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확대가 두드러졌다. 기업 646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신입 채용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채 비율은 ▲대기업 59.5% ▲중견기업 44.9% ▲중소기업 31.8%, 수시채용비율은 ▲대기업 21.6%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45.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대기업의 올해 공채 계획이 지난해보다 8.1%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수시채용 계획은 9.8%포인트 늘었다는 점. 계획대로 채용이 진행되면 올해 대기업 5곳 중 1곳은 수시채용이 확 실시된다. /한용수 기자 hys@